
성장엔진 연계
지역인재 양성방안
(서울대 10개 만들기)

2026. 4.

교육부

목 차

I. 추진 배경	1
II. 정책 방향	5
III. 주요 추진과제	6
①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학 및 연구 거점 육성	6
② 지역 시 교육·연구 거점 육성	10
③ 대학 전반의 산학연 성장 브릿지 구축	14
④ 성과 확산으로 지역대학 동반성장 지원	16
IV. 정부 지원전략	17
V. 향후 추진일정	20

I. 추진 배경

1 추진 필요성

- ✓ “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거점국립대를 지·산·학·연 협력의 허브로 육성하고, 학부·대학원·연구소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”
(‘25.11.4., 대통령 2026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)
- ✓ 국정과제 55-1. ‘서울대 10개 만들기’로 국가균형성장 추진

□ 국토공간 대전환을 위해 성장엔진 산학연 허브 구축

-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 국토공간을 ‘5극 3특’ 초광역권으로 재편하고 성장엔진 산업을 육성하는 범정부 ‘국토공간 대전환’ 프로젝트 추진
- 지역 생산성 제고를 견인할 성장엔진 기업이 ‘적기’에 우수인재와 혁신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과 ‘일체화’된 체계 구축이 강조
※ 지역 고등교육 투자액 증가시, 차년도 지역내총생산(GRDP)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(KEDI, '21)

□ 미래사회 수요에 대응하는 지역 고등교육 체계 개편

- AX 시대 진입으로 산업 및 노동 시장이 AI 기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대학 교육체계 및 교육과정 개편 시급
※ 전 세계 고용의 약 40%(선진국 약 60%)가 AI에 노출되어 있으며, AI 활용 가능 여부에 따라 근로자 간 생산성·임금격차 심화될 가능성(IMF, '24)
- ‘축소사회’로의 연착륙을 위해 거점국립대는 권역별 거점 역할을 수행, 지역대학은 특성화 강소대학으로 육성하는 지역 인재양성 전략 마련 필요

□ 지방에서 진학-성장-정주가 이루어지는 선순환구조 구축

- 졸업 후 진로, 교육·연구 여건 등으로 수도권 중심 대학 서열화가 고착되어 있고, 우수한 지역인재는 수도권 대학 진학 선호
※ 2025 QS 세계대학평가 기준 국내대학 상위 20개 중 14개가 수도권에 소재
- 지방에서도 최우수 수준의 교육·연구와 미래 기회가 주어지는 동시에, 졸업 후 정착하여 살고 싶은 매력적인 정주환경 조성 병행 필요

⇒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를 통해 5극3특 권역별 거점국립대를 지역 성장을 위한 성장엔진·AI의 지산학연 협력 허브로 육성

- ❖ 대학 경쟁력의 원천은 '우수교원(연구자)*'과 '우수학생**' 등 '인재' 확보가 핵심
 - * (교원) 기본적 처우와 충분한 연구비, 동료 연구자와 협력기업(기관), 연구장비 등 지원 필요
 - ** (학생) 취업·진로 전망, 대학 평판, 교육지원 인프라·프로그램 등을 진학 시 중요 요소로 판단
- ❖ 과거 거점국립대는 서울 주요대학과 비견할 사회적 평판을 유지하였으나, IMF 이후 상대적 위상과 선호도가 점차 하락하였고 각종 경쟁력 지표*도 저조
 - * 학생 1인당 교육비 25.4백만원('24), 학부 취업률 58.1%('24), 이공계열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26.2명(정원기준, '25)

① [사회구조] 인구감소 및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지방 비선호

- (인구감소) 입학자원 축소*로 거점국립대 등 지방대학은 학생충원에 타격
 - * 대학 입학자원은 '25년 약 45만명에서 '40년 약 28만명으로 감소 예상
- (지방소멸) 누적된 수도권 중심 불균형 성장으로 우수기업, 사회 인프라 등의 수도권 쏠림이 심화되고, 지방은 소멸위기에 봉착
 - 지방 산업기반 약화로 산학연협력 선순환 구조가 붕괴되어, 교원은 '산학연협력 약화', 학생은 '일자리와 취창업 기회 축소'에 직면
 - ※ 국내 500대 기업 본사소재지의 77%가 수도권에 집중('23), 수도권 소재 디지털 기술기업('22): 76.5% / 혁신산업 수도권 비중('22): 63.4%
- 거점국립대를 비롯하여 지방대학 전반에 대한 사회적 선호도 하락

② [교원] 대학 발전의 주체인 교원의 '지속 성장'이 어려운 환경

- (연구·정주여건 열악) 지방대학은 연구 여건 및 생활·정주 인프라가 열악하여 지방대학 우수 교원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경향
 - 동료 연구자 유출과 우수 대학원생 부족으로 연구기반 축소 → 연구비 투자 수주 부족* → 대학 연구경쟁력 약화의 악순환 초래
 - * '24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(공학계열 백만원): 거점국립대 296, 서울 10개 사립대 530, 서울대 731
- (성과관리 미흡) 공무원으로서 안정적 신분보장은 엄격한 성과관리 미흡으로 연결, 지속적 교원의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기 어려운 구조
 - 연구 실적 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학부 책임수업시수를 적용하는 등 성과 창출을 독려하는 교원 인사 제도·문화 미흡
- 우수한 성과를 내는 교원일수록 지방 거점국립대를 떠나는 악순환

③ [학생] 졸업 후 진로가 보장되지 않고 체감되는 지원이 부족

- (불안한 미래진로) 서열화된 대학 평판과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지방대 졸업 이후 취창업이 불리한 현실

❖ 성균관대 학부모·학생(대학생, 중고생), 교수 등 설문조사 결과('25.8.), '지방에 있어도 가고 싶은 최고수준 대학'의 요건 1순위는 '안정된 취업과 진로 보장의 통로가 되는 대학'

- '지방대학 졸업 후 지역 정주 요건' 1순위는 '경쟁력있는 일자리의 존재(연봉, 복지, 발전가능성 등)

- (학생지원 부족) 학생 교육비가 충분하지 않아 학생의 선호도가 높은 연구·창업·글로벌 교육 등 고비용 프로그램 운영 여력이 부족

※ 4대 과기원은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(URP), 기술창업 지원, 해외 연수 및 교류 제공뿐만 아니라 등록금 지원, 기숙사·생활비 등 전폭적 장학지원까지 병행

→ 우수학생의 매력적 진학 선택지가 되지 못하고, 서울 소재 대학으로 유출 심화

④ [정부정책] 거점국립대의 특성을 고려한 행·재정적 종합 지원책 미흡

- (지원전략) 국립대와 사립대는 설립목적, 재정구조, 조직특성 등이 근본적으로 상이하나, 대부분의 재정지원사업에서 차별화된 지원전략 미흡

※ 지방대학 전반에서 대학운영 모델이 동형화되고, 국립대의 '공공성·책무성' 달성, 사립대의 '설립 목적 실현 및 과감한 특성화'에 한계

- (재정투자) 대학 내 분야별·기능별 분절화된 재정지원으로 효율적 투자가 제한적이고, 기본재정지원*도 여전히 낮은 수준

* ('24)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기본재정지원(공모사업을 제외한 인건비·경상비·일반재정 지원 등)은 11.1백만원으로 서울대(20.7백만원)의 54%(대부분은 교직원 인건비 격차)

- (제도적 지원) 국립대는 국가기관 전반에 공통 적용되는 경직적 제도*로 인해 본질적 체질 개선 도모, 유연한 조직 운영이 곤란

* 전임교원에 대한 사립대·민간 대비 낮은 연봉 수준, 이중소속 불가 등

→ 혁신역량이 저하되고 교육·연구 거점으로서 선도 역할 수행에 한계

⇒ 거점국립대의 교육·연구가 지역성장과 국토공간 대전환으로 직결되도록 범정부 국가균형성장 정책과 연계된 '성장엔진·AI 특성화'에 집중

⇒ 지방 거점국립대에 대한 집중 투자와 엄격한 성과관리로 교육·연구 경쟁력을 제고하여, 거점국립대가 선도하는 인재지도 재설계

< 주요 추진 경과 >

-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공약으로 ‘서울대 10개 만들기’ 제시(’25.5.), 국정기획위원회 논의(’25.6~8.)를 거쳐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*로 확정(’25.9.)
 - * (55)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- (1) ‘서울대 10개 만들기’로 국가균형성장 추진
 - 인공지능 고등교육 분야 인재양성 방안 정책연구 추진(’25.5~8월), 국정기획위원회·지방시대위원회·산업부·기재부 등 관계기관 협의, 대학·산업계 의견수렴 등
 - 제42회 국무회의 ‘국가균형성장’ 토의안건 상정(’25.9.16.)
- 실행력 높은 방안 수립을 위해 국정과제 주요내용을 담은 ‘지방대학 육성 방향(안)’을 우선 발표(’25.9.), 각계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 추진(’25.9~)
 - (국회) 국회토론회(’25.11, 교육위원장 주최), 국회입법조사처 간담회(’25.8) 및 세미나(’25.12) 등
 - (현장) 장관 주재 거점국립대 총장 간담회(2회) 및 현장 간담회(2회), 국공립대 총장협의회(2회), 전국국공립대교수연합회 등 다층적 의견수렴 추진
 - 경남지역 대학총장간담회(차관, ’25.9),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(차관, ’25.11), 미래교육 자치포럼 토론회(’25.9), 산업계와 함께하는 대학교육 혁신포럼(’25.10.) 등
 - (거점국립대 TF) 교육부-거점국립대 상시 협력 TF를 구성하여 세부과제 구체화(’25.10.~, 7회), 우수교원 유치를 위한 교무처장 간담회(3회) 등
 - (관계기관)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보고(3회) 및 협의(수시),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보고(3회) 및 고등교육특위 논의(12.12.) 등
- 2026년 정부예산 확정(’25.12.2.)을 토대로 ‘지방대학 육성 추진단’ 발족(’25.12.11.) 및 대통령 업무보고(’25.12.12.) 등 추진
 - 여당 정례 정책조정회의(’25.12.22.), 추진단 논의(’25.12.~’26.3.), 국무총리 주재 국정집중점검회의 논의(’26.2.27.) 등
 - 거점국립대 총장 간담회(’25.12.~, 2회), 교육부 출입기자단 사전간담회(’26.1.14.) 등
-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 추진 발표(’26.2.1.) 및 핵심과제로 거점국립대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 육성 등 ‘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’ 포함
 - ‘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범정부 협의회’ 발족(’26.2.25.), 여당 정례 정책조정회의(’26.4.6.), 지방시대위원회(인재양성전문위) 논의(’26.4.8.) 등

II. 정책방향

목표

지방 거점국립대를 산학연 협력 허브로 새롭게 디자인하여
대한민국 균형성장 실현

	추진 전략 및 과제	기대 효과
1	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학 및 연구 거점 육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성장엔진 분야 산학연일체형 브랜드 단과대학 육성 성장엔진 기업 공동연구소 등 특성화 융합연구원 설립 	성장엔진 핵심인재와 혁신 기술개발로 지역 잠재성장을 제고
2	지역 AI 교육·연구 거점 육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학 AI 교육·연구 구심점 확립 및 기반 확충 AI 전문·융합교육 운영 및 지역 AX 교육·연구 수행 	AI 인재 양성과 지역 AI 허브 구축으로 지역 AX 혁신 가속화
3	대학 전반의 산학연 성장 브릿지 구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계약학과, 부트캠프, 산업학위 등 산학일체형 교육 강화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창업 활성화 	산업-대학-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혁신 선순환 활성화
4	성과 확산으로 지역대학 동반성장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5극3특 공유대학을 통한 공유·협력 확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등 정주 일자리 확충 	지역 대학의 학생도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

거점국립대 투자 확대 및 제도 혁신을 통한 지역성장 뒷받침

정부 지원 전략

제도 혁신	인적 투자	재정적·물적투자	범부처 연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성과 중심 교원 인사제도 혁신 규제혁신 및 법적 기반 마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교원 확충 및 겸직 활성화 연구비·정주 등 패키지 지원 도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교육비 투자 단계적 확대 첨단 인프라 확충/공동활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주환경 조성 병행 지방우대 제도 재설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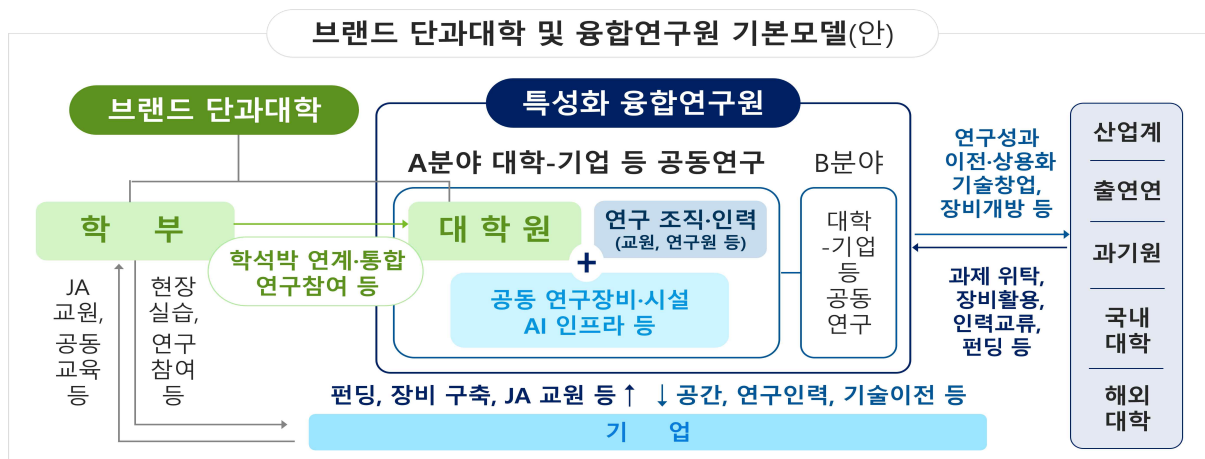
Ⅲ. 주요 추진과제

1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학 및 연구 거점 육성

- ▣ 성장엔진 산업분야 기업과 일체화된 산학연일체형 학부-대학원-연구소 육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학 및 특성화 융합연구원 육성
 - '26년 3개 거점국립대에 전략적·집중적 지원과 엄격한 성과관리로 지역성장 성공모델을 창출하고, 타 대학·분야로 단계적 성과 확산

□ 추진 개요

- (개요) 거점국립대와 성장엔진 기업*이 협력하여 일체화된 인재양성 및 R&D 수행을 위해 특성화된 ‘브랜드 단과대학 및 융합연구원’ 설립
 - * 기존 권역 내 성장엔진 앵커기업뿐만 아니라 지방 이전 또는 신규투자 추진 기업, 대기업 등을 포함
- (특성화 분야)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선정되는 대학 소재 권역의 성장엔진 산업과 연계하여 특성화할 분야 결정



□ 기업과 일체화된 브랜드 단과대학 설립

- (목적) 기업과 일체화된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여 ‘기업 주도’로 성장엔진 현장에 즉시 활용 가능한 핵심인재를 적기에 충분히 양성

- **(학부)** 기업과 밀착된 산학연일체형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우수 인재 파격적 지원으로 전략산업 핵심인재 양성(교당 연 300명 내외)
 - 대학은 학과구조 개편, 교육과정 설계, 교과목 운영, 학생지원 프로그램 등 단과대학 운영 전반에 기업 주도적 운영체계* 수립
 - * 타 단과대학(학과) 등과 차별화되는 독자적 운영 규정, 의사결정구조 등 수립
 - 기업은 수요인재의 핵심역량, 수준 등을 반영한 교육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, 기업 연구원의 대학 겸직 등 교육 참여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

【 운영 예시 】

- **(운영체계)** 교육과정 설계 및 교과목 신설 등을 핵심기업이 주도, 기업 연구원이 교원으로 겸직하며 강의 운영, 학생 선발 시 기업-대학 공동 선발 등
- **(교육과정)** 학부생 연구참여 프로그램, 학석박 통합연계 과정 확대, 기업 협업형 프로젝트 기반 강의(PBL), 현장실습 운영, 기업 협업 단기 실무교육과정(부트캠프), 글로벌 인턴십 등
- **(학생지원)** 등록금 지원, 기숙사 우선 입사, 우수학생 조기 발굴 및 포괄지원 장학 프로그램 등

참고

학부과정 대학-기업 일체화 운영 혁신 해외사례

- ▶ <다이슨 공과대학> 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다이슨 직원으로 채용(급여 지급), 주3일은 다이슨 엔지니어들과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(근무), 주2일은 전공 수업을 수강하는 '이론-실무 일체화' 커리큘럼 운영('17년 워릭대와 협력하여 설립 → '24년 독자 학위수여권 확보)
- ▶ <롤스로이스 학위도제제도> 사업장 인근 대학과 연계하여 3~4년간 일학습 병행(예: 4일 현장근무+1일 강의수강), 재학 중 정규직원으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이수 후 채용 보장

- **(대학원)** 특성화 융합연구원과 융합된 석박사 과정으로, 기업 실제 R&D 프로젝트에 기반한 실무형 고급인력 양성(교당 연 150명 내외)
 - 핵심 고급인재의 적기 양성을 위해 학·석·박 통합과정* 등 학부-대학원 통합·연계과정을 확대하고, 기업 실제 프로젝트 기반 교육·연구 확대
 - *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학·석·박 통합과정 운영 근거 마련('26.2.)
 - 대학원생은 특성화 융합연구원에 이중 소속하여, 전문 연구원에 준하는 전폭적 연구장학금을 지원받으며 일과 연구(학업) 병행 구조 확립

□ 기술주도 성장을 견인할 특성화 융합연구원 육성

- (목적) 성장엔진 산업군에 필요한 응용·융합 R&D 플랫폼으로 기업, 과기원 (IST), 출연연, 서울대, 국내외 우수대학 등과 전면적 R&D 협력체계 구축
 - (조직·인력 구성) 연구원 내에는 최적의 연구 수행을 위해 성장엔진 (세부)분야별 연구소(센터), 연구팀(유닛) 등 구성 가능
 - 주제별 유연한 연구팀(유닛) 구성으로 융합연구를 촉진하고, 국내외 대학 교원 및 연구자의 자유로운 참여 허용
 - 연구원은 기존 대학교원* 뿐만 아니라 기업 겸직 연구원, 전문 연구원 등 유연하고 다양한 임용 형태로 구성하고, 테크니션 등 전문직원 확보
- * 연구원 소속(참여) 교원의 연구몰입 환경·문화를 조성하고, 성과에 따라 파격적인 차등 보상이 적용되는 '(가칭)특성화 교원 트랙' 운영
- ※ 박사후 연구원(포닥)의 법적 지위 명문화를 위한 「고등교육법」 개정 추진

< 연구원 인력 구성(안) >

구분	근무 형태	원소속
겸직 교원	브랜드 단과대학과 융합연구원 겸직	단과대학 (학과)
연구원 소속 교원	초빙 등 비전임 교원/연구원(탐티어급 포함)	연구원
전문 연구원	연구원 소속으로 기업 R&D 등 수행	연구원
테크니션 등	장비 관리·운용 전문인력, 행정직원 등	연구원
대학원생	브랜드 단과대학 대학원생(전문 연구원 역할 병행 가능)	단과대학 (학과)
출연연/과기원/타대학 JA	출연연, 과기원, 지역대학과 융합연구원 겸직	타 기관

- (거버넌스 운영) 학내 연구원 운영규정 마련, 연구원 운영 전반을 심의·의결하는 운영위원회 구성·운영으로 연구원 운영 자율성 강화
 - 연구원 예산 운용은 운영위원회에 편성·집행 자율성을 부여하고, 외부 연구수주 외에도 연구 플랫폼으로서 공동연구 등 자율 기획·추진

【 운영 예시 】

- (인력 확보) ▲ 연구원 자체인력 확충, ▲ 대학원과 기능적 결합을 통한 연구 인력풀 확장, ▲ 타 기관 JA 적극 활용(연구참여 허용)
- (연구몰입환경 조성) ▲ 연구성과가 우수한 교원 대상 학부 책임수업시수 감축, 공동 연구장비·시설 우선 활용 등 지원, ▲ 연구행정 지원기능 뒷받침
- (장비시설 공동활용) 연구원 장비·시설의 타 기관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 배치, 활용·관리체계 확립, 장비활용 교육과정 운영, 공동활용을 통한 수익 확보 등

○ (대학-기업 공동연구소) 연구원 내 기업과의 공동연구소를 설립, 장기 산학연 공동연구 및 고급인재 파이프라인 일체화 모델* 육성

* (핵심요소) 대학-기업 공동 투자 → 조직·인력 융합(대학원생 참여) → 공동 R&D →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 수익창출 → 재투자로 지속발전 가능한 성장모델 구축

- 공동연구소를 기반으로 기업 연구원의 대학 겸직 및 교육과정 운영, 대학원생의 실제 기업 프로젝트 참여 등 산학연일체 실현

참고

대학-기업 일체화 운영 혁신 해외사례

▶ 영국 롤스로이스 대학기술센터(UTC)

- 대학에 연구자금을 지원하여 기업브랜드 공동연구센터(전용센터) 설립 및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(옥스포드대-고체역학, 케임브리지-재료공학 등)
- 기업 엔지니어가 대학에 상주하거나, 대학원생이 본사에 파견되는 등 '인력의 일체화'와 함께 센터에서의 성과물을 본사로 이전
- 대학 석박사생은 센터 연구실에 소속되어 기업의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, 졸업 후 롤스로이스 및 연관 공급망 기업으로 다수 채용

○ (공동 연구장비·시설) 성장엔진 분야 고가 첨단장비 기반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대학·출연연 등과 공동활용체계 조성

○ (산업계 이전) 기술이전 전담조직·기능 강화, 전문인력 확충으로 연구 성과물을 기술이전, 창업으로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자립 기반 마련

- 기술이전·사업화 성과를 창출한 연구자 및 기여자(TLO 전문인력 등)에 대해서는 수익 보상 다양화, 업적평가 반영 등 인센티브 내실화
- 교원의 기술창업을 업적으로 인정, 승진심사 등에 반영하고, 창업휴직제 확산, 기술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교원 기술창업 촉진 기반 마련

2 지역 AI 교육 · 연구 거점 육성

▣ '26년 3개 거점국립대 내 AI 교육·연구 거점을 확립하여 AI 전문·융합 인재를 양성하고 성장엔진 AX 혁신 지원 및 지역사회 확산을 통해 지역 AX 생태계 조성

□ 대학 AI 교육 · 연구의 구심점 확립 및 기반 확충

○ (AI 학사조직 개편) AI 융합이 필요한 여러 단과대학·학과 간 연계를 기반으로 AI 융합교육과정을 개발·운영하는 학사조직 마련*

* 조직 형태(단과대학, 융합학과·융합전공 등)는 대학 여건과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시

- 아울러, AI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학과(AI·CS·SW 등)의 조정·개편* 및 학부-대학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체계 구축

* 학과·전공 집적화를 통한 교육자원 공동 활용 및 교육과정 공동 운영 등 추진

○ (AI 거버넌스 설치) 학내 AI 융합교육의 전방위 확산을 위한 총장 직속 전담기구* 마련 및 다양한 구성원 참여 유도

* (역할 예시) 대학 AI 교육전략 수립, AI 학사조직 구성, 여러 전공 간 조정 및 역할 분담 등

- 전담기구의 장은 학내 의견조율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사 (예. 부총장급 이상)로 임명하고 의사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권한 부여*

* (예) 기획 및 예산(사업비) 배분, 교내 위원회 권한 위임을 통한 대체 심의 등

참고 AI 교육체계 관련 해외사례

▶ (University of Florida) 부총장, 교무처장, 단과대학 학장 등으로 구성된 AI TF를 통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, 대학 전체의 교육과정에 AI 교육을 통합

▶ (UC Berkeley) 학제 간 융합을 위해 단과대학(CDSS)을 신설('23)하고 전기공학·컴퓨터과학 (EECS)을 기존 학사조직과 공동 운영, 기초교과(D8) 기반 여러 학문 간 융합교육 운영

○ (AI 인프라 확충·집적화) GPU 서버, 실습실 등 AI 교육·연구 인프라 확충 및 클라우드 기반 컴퓨팅 서비스 지원

- 연구실마다 분산된 서버 등 인프라를 집적화하여 통합관리체계 (테크니션 등 인력 및 조직) 마련 및 지역 공동활용 촉진

- AI 모델 미세조정(Fine-tuning), 대규모 데이터 처리·저장 등 학생의 AI 실습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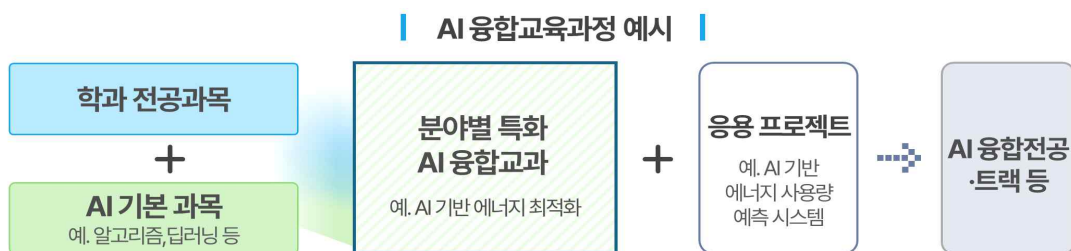
□ AI 전문·융합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

- (전문교육) AI 개발자에 요구되는 역량 변화*를 반영한 교육과정 재설계, 전공 과목에서 AI 윤리교육 통합 설계 추진

* (기존) 코드 생성 능력 → (변화) 문제 정의 및 설계, 협업 역량, 코드 검증·위험 관리 등

- (융합교육) AI 전공자가 도메인 지식을 습득하고, 도메인 전공자는 AI를 이해·활용할 수 있는 분야별 AI 융합교과 개발

- 도메인 특화 AI 모델 설계·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역 성장엔진 분야 및 AI 융합이 시급한 분야 연계 AI+X 교육과정 개발



- (실전형 교육) 기업 현장 데이터 기반 실전 문제를 학생들이 AI를 활용하여 해결하고 기업 재직자가 멘토링하는 실전형 프로젝트 운영

- 다양한 전공 학생들이 AI 활용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운영 및 교과목 연계를 통한 학점 인정

- 창업 경험자가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실전형 AI 기술창업 특화 교육 실시, AI·AX 예비창업가 창업지원금, AI 인프라 등 지원

- (기반 구축) AI 교원의 AI 교육·연구 실적 및 기여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원업적평가 개선* 및 AI 교육 기여 교원 대상 인센티브** 부여

* (예) AI 융합교과목 개발·운영, 융합교과목 팀 강의 운영, AI 융합교과목 개발 우수사례 수상, 타 전공 교원 대상 AI 교육, 탑티어(Top-Tier) 컨퍼런스 논문실적 등 반영

** (예) 대형 강의 운영 시 수강생 수에 비례한 조교 등 강의보조인력 지원, 수당 지급 등

- 비전공 교원이 전공 특화 AI 융합교과를 직접 개발·강의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센터(CTL) 등을 통한 AI 기본-심화연수 운영 및 점검

-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육과정위원회 운영 및 학생 AI 역량 측정*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환류체계 마련

* 역량 측정 항목 및 방법은 AI 거점대학이 공동 개발하고 타 대학과 공유

□ 지역 AX 교육·연구 생태계 조성

- (지역 AX 연구) 지역 기업이 참여하는 산학 공동 AX 연구센터*를 운영하여 “지역 성장엔진 특화 AX 연구” 등 AI 융합연구 수행
 - * 연구센터 등 운영 형태는 자율이며, 필요시 특성화 융합연구원 등과 통합 운영 가능
- 산학 공동 지도교수제 및 대학원생 교류 인턴십, AX 연구 프로젝트 성과물로 석사학위 취득 지원 등 산학연계 제도 운영
- AI·AX 대학원 진학 촉진을 위한 학·석사/학·석·박 패스트트랙 연계 패키지 지원* 및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(URP) 운영
 - * 우수인재 대상 장학금, 연구장려금, 글로벌 공동 연구 프로그램 등 집중 지원
 - ※ 학기 또는 하계·동계 등을 활용하여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을 지역대학 학생에게 개방
- (지역 AI 인재 네트워크) AI 거점대-AI 단과대(과기원)-AI 중심대 등 지역대학 간 협업을 통한 지역 AI 교육모델 확산 및 자원 공유
 - 거점대-과기원 간 AI 학사조직 운영 협의체를 구성하여 학점교류, 교원 겸직, 공동 지도체계 구축 등 단계적 협력 고도화
 - AI 중심대, AX 대학원 등 사업과 연계하여 워크숍 공동 개최 등을 통한 우수·실패 사례 공유 및 교육과정 연계방안 논의 등 추진
- (교육·연구·평생학습 연계) 초·중·고 학생 대상 맞춤형 AI 교육·연구 프로그램 운영 및 예비·현직교원 대상 AI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

【 운영 예시 】

- 고교학점제 연계 수업 운영 : 대학-시·도교육청 협약을 통해 학교 내 개설이 어려운 고등교육 심화 단계 내용을 대학에서 개설·운영
- 영재학교·과학고-대학-기업 연계 AI 심화연구반 : 연구 수행 및 연구 멘토링을 통해 실험·탐구(R&E) 중심 교육 지원
- 대학생 AI 멘토링단 : AI 관련 역량을 가진 대학생들이 초·중·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

- 지역 산업 재직자, 지역주민 등 대상 AI 문해력, 최신 AI 기술 관련 강의 등 온·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 운영*

* (예) 지역 산업 특화 AX 교육, 관리자·기술 실무자 등 직무별·수준별 교육 프로그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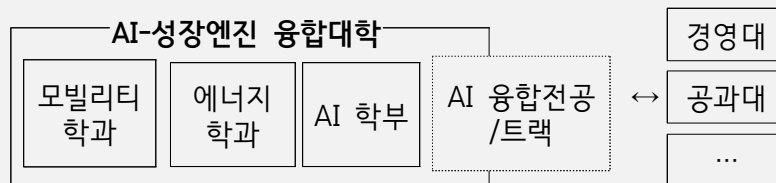
【 브랜드 단과대학 - AI 거점 패키지 지원에 따른 운영 모델(예시) 】

교육 연계 구성(예시)

- (조직구성) 성장엔진 분야의 ‘브랜드 단과대학’을 기본 설립하고, AI 전문·융합인재를 최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단과대학, 학부(과) 등을 유연하게 구성
 - 대학 여건과 특성에 따라 구성하되, 학부-대학원 간 연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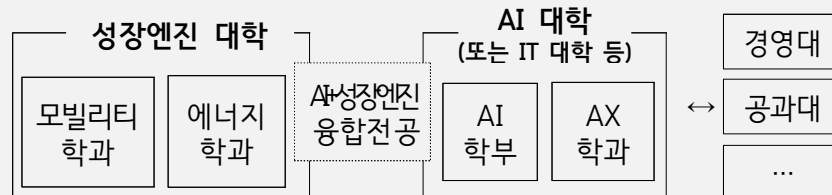
(예시 ①) 성장엔진과 AI를 하나의 단과대학으로 통합 설립하는 모델

- 성장엔진 분야 학과는 AI 분야가 융합된 정규 교육과정 운영
- ‘AI-성장엔진 융합대학’을 중심으로 인문, 사회과학, 경영, 의료 등 여러 전공 간 융합전공·트랙 등을 유연하게 운영



(예시 ②) 성장엔진 분야 단과대학을 AI 분야와 별개로 별도 설립

- AI 분야는 AI 단과대 별도 설립 또는 기존 단과대 내 AI 학과 등 자율적 구성
- AI+성장엔진 융합전공·트랙 등을 운영, 다양한 전공 간 융합전공·트랙도 유연하게 구성



- (교육운영)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전반에 있어 기업 참여 확대, 프로젝트 기반 문제해결형 교육과정, 학부생 연구프로그램 참여, 학석박 패스트트랙 등 타 단과대학(학과)과 차별화되는 교육과정 설계·운영

연구 연계 구성(예시)

- 특성화 융합연구원을 중심으로 산학 공동 성장엔진 AX 연구센터 /팀(유닛) 등을 유연하게 구성
 - ※ 다만 성장엔진과 관련성이 낮은 AI 연구가 필요할 경우 별도 연구소 설치 가능
- 성장엔진 대학원 및 AI 대학원은 특성화 융합연구원 내 프로젝트와 연계 하여 대학원생의 실제 기업 R&D 프로젝트 참여, 연구장학금 등 지원

3

대학 전반의 산학연 성장 브릿지 구축

▣ 전체 거점국립대가 기업·산업 현장과 밀착하여 기업 성장동력이 될 인재를 양성하고, 산업계 인재가 지역대학에서 지속 성장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

□ 우수기업 취업보장 **계약학과** 설치 확대

○ (**계약학과 확충**) 입학 시부터 지역 앵커기업, 학생 선호 우수기업 등에 취업이 보장되는 계약학과를 수도권 대학 수준으로 설치 확대*

* ('25년) 수도권대 평균 86명, 거점국립대 평균 42명 → ('30년) 거점국립대 평균 80명

○ (**계약정원 확산**) 별도 학과 설치 없이도 신속하고 유연하게 지역 산업 맞춤형 교육 운영이 가능한 계약정원제 운영 확대

○ (**참여 확대**) 입학단계뿐만 아니라 재학 중 계약학과로 전과* 등 기업의 인재 확보 루트를 다변화하고, 기업 부담금을 완화하여 기업 참여 유인 제고

* 계약학과 설치·운영규정 제22조의2 신설 완료('25.12.)

※ 국가, 지자체 지원을 통해 산업체 계약학과 운영 부담금을 50% 미만으로 설정 가능

□ 실무 역량을 키우는 **산학일체형 교육** 확대

○ (**산학일체형 교육**) 기업·공공기관 공동 부트캠프, 현장실습, PBL 등 확대로 교육과정 안에서 실무역량을 충분히 쌓을 수 있도록 지원

-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는 최신 기자재 확충으로 질 높은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,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현장 프로젝트 기반 교육 확대

사례

인문사회·예체능분야 현장 중심 프로젝트 기반 교육 운영(한양대)

- ▶ (사학과-국회기록보존소 협업) 국회기록보존소 현장 방문, 역사기록물 보존 현황조사 실시 등 현장실무자의 특강 및 문제 시나리오 제시를 통한 실무 중심 PBL 교육
- ▶ (음악학과-EBS 협업) EBS PD가 방송 제작 관련 전문지식을 특강하고 주제를 제시, 학생들은 영상제작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PD가 교육 참여 및 평가

○ (**산업학위 도입**) 기업·대학이 공동 R&D 프로젝트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하고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'가칭'산업학위(Industrial Degree)' 도입

※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등 개정 추진

사례

미국 노스이스턴대 Industry PhD 운영 사례

- ▶ (개요) 연구 성과를 산업환경에 적용해 **실제적인 문제해결 역량**을 갖춘 박사급 연구원을 양성하고자, 기업·대학이 함께 운영하는 박사 학위과정
 - 기업은 대학에 **학생 등록금을 납부**하고, 기업 관계자는 학생의 **논문심사위원회 위원**으로 활동, 연구를 통해 발생한 **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**(기밀 보장)
 - **재직학생**은 통상 기업에서 수행하는 **연구프로젝트**에 배치되어, 매칭된 지도 교수와 기업 관계자의 **모니터링** 아래 연구를 수행

□ 미래사회 융합인재로의 기본역량 함양 지원

- (AI 기본역량) 전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AI 시대에 필요한 기초 역량과 윤리적 소양을 갖추 수 있도록 AI 기본교육 필수 이수제 도입
 - 입학 전 기초교육 - 입학 후 AI 기본교육 필수 이수 - AI 융합과정* 등 단계별 AI 교육과정 체계화 및 맞춤형 이수경로 제공
 - * AI 거점대학 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전공-AI가 결합한 융합과정을 확산·체계화
- (글로벌 역량) 해외대학 학점교류, 공동·복수학위제 등 중장기 글로벌 교육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
 - ※ '30년 거점국립대 재학생의 글로벌 프로그램(비교과 포함) 참여율 10% 이상 목표
 - 단기 해외연수는 정규교과와의 연계성 확보, 프로젝트형 프로그램 등으로 내실화하고, 대학 간 공동 운영*으로 프로그램 확대·다양화
 - * (예) 서울대 'SNU in the World Program' 모델을 토대로 거점국립대와 공동 운영 단계적 확대
 - 대학(원)생의 국제학술대회, 세미나, 워크숍 등 국제 학술교류를 지원하고, 해외 대학·연구기관·국제기구 등 연구 인턴십 지원 확대
- (창업 기회 확대) 창업 도전 문화 확산을 위해 창업친화적 학사제도*를 지속 확산하고, 실전형 창업교과 개발·확산 등 대학창업 활성화
 - * 창업 휴학제도 활성화(승인기간 확대, 승인절차 간소화, 신청요건 완화 등), 창업 대체학점인정제 인정범위 확대 등
 - '창업도시*' 프로젝트(중기부)와 연계하여 대학발 스타트업에 대한 Scale-up을 위한 자금·투자, R&D 등 성장 전주기 패키지 지원
 - * ('26) 4개 도시(대전, 대구, 광주, 울산) → ('27) 10개 도시까지 확대 예정

- ▣ 거점국립대의 자원과 인프라를 타 국립대, 사립대, 전문대 등과 공유·협력하고, 졸업 후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마련

□ 5극3특 공유대학*을 통한 대학 간 공유·협력 확대

*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(앵커, 舊 RISE)를 통해 재정지원('26~)

- (범위 확장) 기존 시·도별 공유대학을 '5극3특 초광역권'으로 넓히고, 공동교육을 넘어 인프라 공유 기반 공동 연구, 창업 지원 등까지 운영 범위 확대
 - ※ 첨단분야 협력 필요성을 고려하여 수도권 대학까지 협력 범위 확대 가능
- (공동교육 확충) 지역전략산업 중심 공동교육과정에 더해 교양교육, 기초학문, 창업교육 등까지 제공해 지역 학생의 역량 제고 촉진
- (기업참여) 기업 공동 개발·운영 교육과정을 필수화하고, 이수자에 대한 기업 인증 체계 도입 등으로 지역 학생의 취업·정주 지원

<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(앵커) 주요내용 >

- 대학에 대한 지원·투자가 지역 정주인재 양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,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(RISE)를 '학생'과 '인재' 중심의 "인재양성체계"로 재정립
- 17개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 양성에 집중하도록 하고, 행정 권역 중심의 現 체계를 산업·경제권에 부합하는 5극3특·초광역 단위로 확장

□ 지역 정주를 위한 일자리 확충 병행

- (양질의 일자리)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* 활성화, 지역의사선발전형** 도입 등 지역 내 우수인재의 정주 기반 확보
 - * (지방대육성법 제13조)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의 35%를 지역인재로 채용
 - ** ('27학년도) 총 490명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 예정
- (학문후속세대) 대학원 졸업 후 '지역 정주 연구자'로서 충분한 처우가 보장되는 대학 내 연구 일자리 확대 지원(거점국립대 연구인력 확충*과 연계)
 - * 특성화 융합연구원 등에서 전문 연구자로서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박사후연구원, 연구원 소속 학술연구교수 채용 등 지원

IV. 정부 지원전략

1 정부의 행·재정 지원

□ 제도 혁신

- **(교원인사제도 혁신)**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는 교원이 걸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학내 교원인사제도를 성과 중심으로 혁신

※ 브랜드 단과대학 지원 시 브랜드 단과대학 및 특성화 융합연구원 참여교원 대상 '대학 인사혁신방안 수립·시행'을 필수 요건으로 포함하고, 타 분야로 단계적 도입·확산

- 브랜드 단과대학 전임교원의 승진·정년보장 심사 시 글로벌 수준의 최우수 연구성과를 요구하는 등 수도권 주요 사립대 수준으로 심사 기준 대폭 강화
- 우수 성과를 창출하는 교원에게는 강화된 성과 차등 보상체계^(가칭) 특성화 교원 트랙)를 마련하여 인센티브 제공(연구인센티브, 연구장비, 연구인력 배정 등)

< 현행 거점국립대·수도권 대학 간 전임교원 승진·정년보장 심사 비교 >

- (논문 실적 인정 기본인정요건) 서울대·수도권 사립대는 'SCI급 국제학술지'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, 거점국립대는 'KCI 이상'으로 규정
- (정성적 요소) 서울대·주요 사립대는 SCI급 상위 20~75% 학술지 등 등재를 요구하는 반면, 거점국립대는 SCI급 학술지 전체 인정
- (동료평가) KAIST 등은 소수 대표논문에 대한 해외 동료평가, 국제적 전문가 추천서 등 요구

- **(규제혁신)** 성장엔진 육성 규제혁신 지원(성장5종세트), 특성화지방대학 규제특례 적용 등 거점 기능 수행 및 혁신을 위한 광범위한 규제특례 부여

- **(국립대학법 제정)** 국립대학이 사회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조직, 인사, 성과 평가 등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「(가칭)국립대학법」 제정 추진

- 특히 특성화 융합연구원의 유연한 운영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별도 법인화* 등 법제화 기반 마련

* (예) 이사회에 기업, 정부 인사 참여 등 연구원 운영 전반에 산업계 요구 반영 강조

- **(IR기능 강화)** 데이터 기반 전략적·체계적 의사결정과 자체 성과관리를 위해 관련 거버넌스, 조직, 인력 등을 확충하고 자율적 환류 추진

- **(책무성 강화)** 교육부 주관 특별점검·종합감사 강화와 함께 자체감사 인력 증원(행안부 협조), 협동감사 체제 도입 등 책무성 확보 뒷받침

□ 인적자원 투자

- **(교원 확충)** 우수 인재의 신규 유입과 교육·연구의 질 제고를 위해 성장엔진 및 AI 분야 중심 교원 확충
 - ※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('25년 공학계열 정원 기준): 서울대 21.3명 vs 거점국립대(평균) 28.6명
- **(겸직 활성화)** 출연연·기업 등 민간 우수인재의 대학 겸직을 활성화 하고, 기관 간 교류 확대 및 이중소속 활성화*
 - * 해외대학·기업·출연연의 우수인재를 전임교원으로 이중소속 활성화(교육공무원법 개정)
- **(국가석좌교수제)** 학문분야 최고 수준의 교원이 정년 제한 없이 교육·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
- **(패키지 지원)** 핵심 우수교원의 신속·전략적 유치를 위해 우수인재 발굴전담팀(총장 직속) 신설 및 연구비·장비·정주 등 지원 패키지* 도입
 - * 사업비 지원을 마중물로 활용하되, 대학 자체재원 확충 등으로 장기적 지속 가능성 확보

□ 재정적·물적 투자

- **(교육비 투자)** 대학별 성과에 따라 교육부 재정지원을 단계적 확대, '26년 약 0.46조원을 시작으로 '30년까지 5년간 누적 4조원 추가투자
 - 이를 기반으로 외부 투자, 자체수익을 확충하면 거점국립대(평균) '학생 1인당 교육비*'는 '30년 약 44백만원('24년 서울대의 약 70%)으로 상승 예상
 - * '24년 25.2백만원으로 서울대(63.0백만원)의 40% 수준
- **(첨단 인프라)** 기업 협업환경 조성 및 최신 교육·연구 기자재 확충 등을 집중 지원, 유관기관과 공동활용 및 수익 창출 유도

□ 정주여건 조성 등 지역 성장을 위한 범부처 연계

- **(정주여건 조성)** 초광역권 성장 전략에 발맞춰 일자리, 주거, 문화, 의료, 교통인프라 등 매력적인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한 범부처 노력 병행
- **(지방우대 배분)** 지방에 더 큰 혜택이 주어지도록 인재육성뿐만 아니라 재정·정책·지원체계를 '지방 우대'로 전면 재설계

2 '26년 재정지원방안

□ 지역성장을 위한 전략적 집중 지원(과제 ①+②+④)

※ 지원대학 선정을 위한 세부사항은 부처간 논의를 거쳐 추후 별도 안내(5월초)

- (방향) 성장엔진-AI 간 융복합 도모, 지역산업 AX 촉진 등 지역성장을 위한 전략적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집중 패키지 지원 추진
- (지원대상) 거점국립대 3개교
- (패키지 내용) ①브랜드 단과대학 육성(교당 400억원 내외)
+ ②AI 거점대학(교당 100억원 내외)
+ ③지역혁신 허브화 인센티브(교당 200억원 내외, 앵커 중 5극3특 공유대학)

※ 대학 규모, 추진계획, 정부 예산 및 지원전략 등을 고려하여 대학별·연차별 지원액 조정 가능

□ 인재양성 경쟁력 제고(과제 ③+④)

- (인재양성 경쟁력 제고) 국립대학육성사업*(일반재정지원), 고가 실험실습 기자재 지원** 등을 통해 산학연 성장 브릿지 구축 지원

* 전체 거점국립대 4,962억원 지원(특성화 지방대학 지원액 포함)

** 전체 거점국립대 486억원 지원

→ 거점국립대 전반의 인재양성 경쟁력 제고

- (성과 확산)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(앵커)를 통해 5극3특 공유대학* 확대 지원

* 전체 권역 총 1,200억원 지원(3개교 집중 지원 패키지 중 '지역혁신 허브화 인센티브' 포함)

→ 거점국립대 확충 자원은 타 지역대학과 공유·협력하여 동반성장 촉진

V. 향후 추진일정

- 2026년 국립대학 육성사업(성장엔진 분야 브랜드 단과대학 포함) 및 AI 거점대학 기본계획 수립·안내 : '26. 5월초
 - ※ '26년 전략적 집중 패키지 지원대학(3개교) 선정계획 포함

- 대학 신청서 제출 : ~ '26. 7월초

- '26년 패키지 지원 대학 발표 : 산업부 성장엔진 확정 후

- 3개 특성화 융합연구원 설립 : '26. 4분기

❖ 상기 일정은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❖